

헌재 최악의 人事, 최악의 판단

태평로



최원규
논설위원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을 얼마 전 복당시키는 걸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헌법재판관 네 명의 반응이었다. 민 의원 탈당은 위장이 아니라서 법안은 유효하다고 했던 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이다. 민 의원의 복당은 1년 전 그의 탈당이 위장이었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 면 재판관들은 영터리 판단에 대한 해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아무 말도 없고, 이석태 재판관은 “헌재는 가장 영광스러웠던 기억”이란 말만 하고 지난날 퇴임했다.

위장 탈당은 명백한 일이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 법사위 통과를 위해 민 의원을 탈당시킨 뒤 안건조정위에 넣어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했다. 그 뒤 법안을 강행 처리한 과정이다 생중계됐다. 민 의원은 복당이 지연되자 작년 12월 “(탈당) 당과 함께 내린 정무적 판단”이라고 고백까지 했다. 그런데도 네 명의 재판관은 “개인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자율적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위

법 없으니 유효라는 형식 논리로 법안 무효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이다. 이들과 함께 법안 유효 결정에 선 이미신 재판관은 위장 탈당의 위법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국회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논리라도 냈지만 이들은 위장 탈당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다. 최고 법관이란 사람들이 이래도 되나. 헌재 역사에 최악의 판단으로 남을 만한 일이다.

이들 재판관은 문재인 정권 때 ‘코드 인사’로 임명됐다. 진보 성향인 우리법 연구회(유남석·문형배)와 국제인권법

코드 인사, ‘인사 거래’ 의혹까지 최악의 人事로 재판관 된 네 명 명백한 민형배 위장 탈당도 부정

문정권 위해 양심 버린 것 아닌가

연구회(김기영), 민변(이석태) 출신이다. 특히 이석태·김기영 재판관 지명 과정에선 ‘인사 거래’ 의혹까지 불거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민변 회장 출신인 이석태 변호사를 지명하고, 며칠 뒤 여당이던 민주당이 김기영 판사를 지명한 인사다. 이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과 잘 모르고, 문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서 공직자감비서관을 지냈다. 김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지만 민주당과는 인연이 없다. 이 때문에 정권과 대법원장이 코드

인사 논란을 피하면서 자기 사람 챙기려고 ‘인사 거래’를 했다는 말이나 나왔는데 정황상 사실상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서로 견제하라는 권력분립의 이상이 담겨 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 보수 인사를 한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도 헌법재판관 코드 인사 논란이 있었지만 이런 적은 없었다. 최악의 인사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재판관이 된 이들이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방편을 위해 온갖 편법과 꾀수를 동원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률가의 양심을 버리고 문 정권에 보은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을 수 없다.

미국 연방대법원도 대법관들의 정교성이 논란이 돼 왔다. 그래도 아직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것은 결정적 순간에 자신을 임명한 정권과 진영 논리를 벗어나 소신 판결을 하는 대법관들이 있기 때문이다. 보수 정권인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 임명됐지만 나태 규제 위원 결정에 선 해리 블랙먼 대법관,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임명됐지만 ‘반(反)트럼프 판결’을 내린 존 로버츠 대법원장 등이 그들이다.

우리 헌재에 그런 재판관은 거의 없다. 대부분이 자신들을 임명한 정권과 정당 편에 선다. 그런 헌재가 왜 필요한가. 네 명의 재판관을 보면서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김준의 맛과 성 [138]

당진 난지도 실치비빔밥

주문한 것보다 식당 주인 밥상에 오른 음식이 더 먹고 싶을 때가 있다. 몇 해 전, 난지도에서다. 실채가 없다는 우렁탕을 시켰다. 그 옆에 주인들이 주인과 이야기를 하며 술잔을 나누고 있었다. 모두 건배를 하더니 술을 털어 넣고, 수저로 무언가를 떠서 조장을 올린 후 후후룩 후후룩 먹었다. 주인이 돌아보고 “한번 드셔보실래요”라며 채소, 겨자, 참기름과 함께 주었다. 궁금하던 것은 ‘실치’였다. 4월부터 5월 중순까지만 회로 먹을 수 있는 흰베도라치의 치어다. 서해와 동중국해에 서식하며 펄과 모래가 섞인 깊은 바다의 바닥에서 생활한다. 겨울에 산란과 부화를 한 후 수온이 올라가면 납작 연안으로 올라온다. 치어들은 연안에서 우럭(조피볼락)

이나 노래미의 먹이가 되고, 어민들이 쳐 놓은 낭장망 그물에 잡혀 물에 오른다. 우리나라 당진, 서산, 태안, 보령, 서천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당진의 난지도나 장고항 인근 바다에서 많이 잡는다. 옛날에는 종선배나 멩팅 구리배로 알려진 해산망으로 잡았다. 모두 큰 조차와 조류를 이용하는 어법이다. 최근에는 멸치를 잡는 낭장망을 이용해 잡는다.

실치는 5월이 지나면 커지고 뼈도 강해져 회보다 포를 만들어 반찬으로 많이 이용한다. 이를 ‘뱅어포’라 하지만 사실은 실치로 만든다. 옛날에는 뱅어가 많이 잡혀 포를 만들었지만, 그 서식지가 파괴되고 오염되면서 뱅어가 자취를 감추자 이를 대신한 것이 실치다. 장고도나 당진에서는 된장을 풀



어서 실치와 시금치를 넣고 된장국을 끓여서 먹기도 했다. 봄철 잡간 당진 앞바다에 나타났다가 5월 중순이면 다시 깊은 바다로 나간다.

많이 잡힐 때는 급속 냉동했다가 찬 바람이 나면 해동시켜 뱅어포를 만들기도 한다. 실치회를 먹다 남으면 밥에 비벼 먹어도 좋다. 주인이 참기름을 함께 준 이유다. 주인들 밥상에 오르다 1990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역축제가 시작되면서 식당에도 등장했다. 4월이면 장고항에서 실치축제를 하기도 한다.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社 說

한전 망친 주범들 모두 건재, 책임자 文은 영화 찍고 책방 정치

한국전력이 2년 3개월간 44조원의 천문학적 적자를 내는 부실 공기업으로 전락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전기 요금 인상 연기와 탈원전 때문이다. 국제 연료비가 급등했으면 그에 맞춰 어느 정도는 전기 요금을 올려야 한다. 초등생도 알 수 있는 상식이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전기 요금을 5년 내내 못 올리게 했다. 제 인기 떨어질까 봐 한전 명드는 것은 상관하지 않았다. 전기 요금을 올리면 탈원전 비난이 쏟아질까 우려한 탓도 있을 것이다. 국민을 속인 포퓰리즘 국정이 엄청난 폐해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다.

한전은 탈원전이 본격화한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여기에 원유·가스 수입 가격이 오르면서 감당 못 할 적자 구조가 만성화됐다. 문 정부 5년간 탈원전으로 한전이 떠난 추가 비용은 간접 손실을 빼고도 25조여원에 달한다. 값싸고 안정적인 원전 대신 값비싼 LNG 발전량을 늘리는 바람에 5년간 발전 원가가 늘어난 것이 한전 부실의 단초가 됐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인상 요인이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대며 단 한 차례 소폭 인상만 하고 5년 내내 전기료를 묶어놓았다. 한전이 10차례나 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묵살했다.

한전을 거덜 낸 것으로도 모자라 선거용 현금 출납기로 썼다. 호

남표를 겨냥해 10년간 1조6000억원이 드는 한전공대를 무리하게 설립했다. 지금 대학 4분의 1이 없어질 판인데 무수 대학 신설인가. 한전 경영진도 정권에 영합해 경영을 거덜 낼 포퓰리즘 요구를 아무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 거액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공공 일자리를 늘리라는 문 정부 지침에 따라 신입 채용 규모를 거의 두 배로 늘리기도 했다. 사상 최대 적자에도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가여운 질타를 받고 반납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

이렇게 우왕 공기업을 부실 덩어리로 만들어 놓고도 당시 정책 담당자와 한전 경영진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건재하다. 탈원전을 진두지휘한 청와대 사회수석은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고, 과학기술보좌관은 아직 국책연구소 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전공대 설립을 주도한 청와대 정무수석은 광주광역시장이 됐다. 한전공대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의원은 10년간 1조6000억원이 들어가는 ‘밀 빠진 독’ 한전공대를 만든 것도 모자라 매년 1조원을 파봐야 하는 ‘양곡법’까지 주도했다. 정권 지시에 따라 한전공대를 세운 김종갑 전 한전 사장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 모든 포퓰리즘 세금 낭비의 정점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은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이 자기 자랑 하는 영화를 찍고 ‘책방’ 정치를 하고 있다.



그리스의 고통스러운 부활, 포퓰리즘은 반드시 대가 치른다

지난 2012년 국가 부도 사태로 신용 등급이 최하위로 추락했던 그리스가 재정 긴축에 성공해 신용 등급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19년 포퓰리즘 좌파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은 중도 우파 정부가 무상 의료, 연금 제도 등을 수술하며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을 펼친 덕이다. 적자에 시달리던 기초 재정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고, 50%를 넘던 은행의 부실 대출 비율도 7%로 떨어졌다. ‘유럽의 문제’로 불리던 그리스가 극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포퓰리즘으로 흥청대던 그리스가 치른 대가는 혹독했다. 재정 과관으로 유로존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몰리자 우파 정부는 임금과 연금부터 대폭 삭감했다. 물가를 감안한 그리스의 올해 평균 임금은 2007년의 72% 수준이다. GDP는 위기 전보다 25% 가량 떨어졌다. 이렇게 국민들이 고통스럽게 허리띠를 졸라맨 끝에 수출이 늘고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2021년 그리스 수출은 2010년 대비 90% 늘었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2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경제 성장률은 재작년 8.4%에 이어 지난해 5.9%에 달했다. 그래도 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려면 10년

이상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포퓰리즘 중독증을 낳은 파란드레우 좌파 정권은 40여년 전 집권하자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주라”며 최저임금과 연금 지급액을 끌어올렸다. 공무원 철발통 일자리도 두 배나 늘렸다. 바는 것보다 많이 쓰는 재정은 단 한 세대 만에 파탄났다. 포퓰리즘 맛을 본 국민은 모든 개혁에 저항했다. 나라 재정은 파탄하든 말든 제 밥그릇만 지키려 했다. 그 혼란 끝에 더 물러날 곳이 없는 벼랑 끝에 몰리고 나서야 그리스 국민도 재정 긴축을 일부 수용하게 됐다.

우리도 불과 25년 전에 국가가 부도에 몰리는 외환 위기를 겪었다. 온 국민이 눈물 젖은 노력 끝에 위기에서 벗어났는데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나타났다. 선거용 인기 선심 정책으로 나라 살림을 거덜 내고 있다.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을 넘고, 1분마다 1억여 원씩 빚이 늘어나는데도 재정을 망치는 포퓰리즘 법안들이 쏟아진다. 재정 적자를 일정 수준으로 묶는 최소한의 장치인 ‘재정 준칙’도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다. 우리도 그리스 꼴이 되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

종편 점수 조작 보고받고 은폐까지 지시, 그래도 버틴다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장이 종편 점수 조작을 보고받은 뒤 이를 승인하고 은폐 지시까지 했다고 한다. 공소장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이 제출한 심사에서 기준 점수를 넘었다는 보고를 받아 “미치겠네. 그래서요?”라며 실무진에게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리고 “웁 좀 먹겠네”라고도 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질책받은 것이란 얘기를 엿들었다.

한 위원장의 불만을 들은 담당 국장과 과장은 외부 출신 심사위원장 윤도 교수에게 점수 수정을 요청했고, 일부 심사위원이 점수를 깎아 다시 제출했다. 한 위원장은 국장에게 “점수 수정으로 TV조선이 과락이 됐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 사실상 점수 조작 지시, 승인 모두 한 위원장이 한 것이다. 이 때문에 TV조선은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 한 위원장은 언론이 이 문제를 취재하자 실무진을 불러 “점수 수정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하라”며 은폐까지 지시했다고 한다. 또 “방통위가 점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보도 자료도 내게 했다.

한 위원장은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수사 받고 있다. 경기방송은 객관적 평가에선 전체 방송국 146곳 중 8위를 했지만 심사위원 주관 평가에선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이 때문에 조건부 재승인을 받고 이듬해 방송을 접었다.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기방송 기자가 한 질문이 정권의 미움을 산 사실이 있다. 이 때문에 점수를 조작했을 것이다.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다. 그런데 정권 뜻에 따라 점수를 조작하고 은폐했다.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은 이 일로 줄줄이 구속됐는데 정작 책임자인 본인만 지시한 적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실질적 조작 지시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겠지만 한 위원장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정부의 면직 절차에 반발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있다. 뻔뻔하고 파렴치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가짜 뉴스'가 자유민주주의의 파괴한다

'자유' 이용해 '자유' 위협... '가짜 뉴스'는 NL극좌운동권 혁명 수단 팩트는 중요하지 않아... 목적 위해 거짓을 사실로 둔갑 시켜

뉴데일리 newdaily.co.kr

30대 '가짜 뉴스'와 '가짜 뉴스' 생산 양대 나팔수

2016년 이래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fakenews) △틀린 정보(misinformation) △그릇된 정보(disinformation)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경향이 올랐다.

한국에서도 최근 <바른언론시민행동>(바른 언론)과 <공정언론시민연대>(공언연) 두 단체가 지난 1년간의 대표적인 30대 가짜 뉴스를 선정했다. 그리고 가짜 뉴스를 퍼뜨린 대표적인 인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김의겸과 방송인 김어준을 꼽았다.

언론이 미쳐 날뛰니, 사람들은 환장했다

근래의 대표적인 가짜 뉴스로는 당연히 MBC PD 수첩의 광우병 보도를 쳐야 할 것이다. 화면에 등장한 소의 비늘거리는 모습은 마치 사실인 양 시청자 의식을 사로잡았다.

박근혜 대통령 등에 쫓긴 거짓의 칼도 태블릿 PC란 날조된 자료였다. 언론이 과벨스처럼 미쳐 날뛰었다. 군중이 도취했다. 광기(狂氣)였다. 발작이었다. 천안문 광장이었다. 나치 군중대회였다. 중세 마녀사냥이었다. 단두대 모형도 나왔다.

현 정부 들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민 방문 △워싱턴 선언 △한일 정상회담 △정몽헌 해군에 대한 보상금 해법(解法)을 두고, 그것이 △독자 핵 개발을 묶은 사설 △사대주의 △빈손 외교라며, 온갖 '나쁘게만 보려는' 프레임이 다 나왔다. 외교엔 상대가 있는데.

사이비 종교 같은 '가짜 뉴스' 생태계

극좌 전체주의 운동권이 득세한 이래, 왜 이렇게 △가짜 뉴스 △틀린 정보 △그릇된 정보들이 폭증하는가? 빅 브라더(big brother) 전체주의 혁명을 위해선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측 △무지는 힘이라는 기만 선동등. 무슨 짓이든 다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가짜 뉴스 △틀린 정보 △그릇된 정보를 퍼뜨려 흑세무민(惑世誑民)하는 게 필수적이다. 그들의 거짓 복음(福音)의 마약 음료를 군중에 퍼는 사기(詐欺)술이 횡행한 것이다.

가짜 뉴스, 틀린 정보, 그릇된 정보

가짜 뉴스란	△뉴스 원문(源文) 근거출처를 알 수 없는 음모론 △거짓 웹사이트 △SNS 상의 반복적 허위 주장(zombie claims) 등이다.
틀린 정보란	맞지 않은 텍스트 같은 것이다.
그릇된 정보란	개인적·집단적 악의와 편견을 전파하는 행위다. 선전·선동·세뇌인 셈이다

우리 사회를 흐드는 [가짜 뉴스, 틀린 정보, 그릇된 정보]는 [중공(中共) 디지털 권위주의 + 북한 노동당 문화교류국 + 한국 미디어 업자들]에 의해 제작·유포된다. 어중간하게 쳐세하는 국민의힘 일부 기회주의자들과 언론들도 극좌의 '조작된 대세'에 적당히 맞추고 산다.

가짜 뉴스에 대한 '진짜 뉴스'의 투쟁 시작하자

자유인, 자유 진영, 윤석열 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가짜 뉴스의 마취로부터 대중을 깨어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오늘의 싸움을 보수·진보 정책 다툼 아닌, △가짜에 대한 진짜의 투쟁 △질병에 대한 항체의 저항 △몽매(蒙昧)에 대한 문명의 세례로 간파해야 할 것이다.

시작하자, 사실과 진실의 반격!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합형으로 5월 12일 게재 되었습니다.